

‘교육발전특구’ 광주시·교육청·대학 ‘혁신 공감대’

이주호 교육 장관 광주 설명회

내년 2월까지 시범지역 1차공모
통합돌봄·특성화고·디지털혁신
“지역 합심해 교육 변화 일으킬 것”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시범운영되는 가운데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도 지방 교육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공모를 두고 각 시도별 설명회를 하고 있으며 이날 12개 시·도중 11번째로 광주를 방문해 추진계획을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공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목표하고 있다.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30억~100억의 예산이 투입되며 규제 완화, 특례 등으로 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지역 대학 총장 등이 21일 광주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원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강기정 광주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각 대학 총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수도권과 지역의 교육 격차가 심해진 상황인 만큼 분명한 위기지만 역설적이게도 교육개혁이 지역에서부터 강하게 시작될 수 있는 기회다. 그것

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다.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과 산업계 등이 합심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며 “광주지역 리더들이 교육을 강조하는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지방을 살려보자는 교육부의 비전에 공감한다”며 “광주시와 교육청, 대학, 지

역의 혁신기업들이 함께 결단하며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4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회의를 통해 광주 지역에 맞는 교육발전 모델 발굴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비전과 목표 등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크게 3가지 공모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돌봄센터 사업 등 광주형 돌봄체제 구축하는 방안 △특성화고 혁신을 통한 취업을 향상 및 지역 상생 방안 △지역 협력을 통한 디지털교육혁신 추진 방안 등이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이날 설명회 이후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계획이다. 현재 1차 공모가 지난 11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이뤄지고 있다. 한편 이주호 장관과 이정선 시교육감은 설명회가 끝난 후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운영 현장을 참관했다. 교육부가 각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율형공립고(자공고) 2.0을 추진하고 있어 2011년부터 자공고로 지정된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교원·학생·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자공고도 교육발전특구도 미래교육의 핵심 정책이다”며 “광주가 인재를 기르고 인재가 다시 광주를 기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

‘검정 브로커’ 비위 연루 전직경찰 등 영장 청구 광주지검

사건 브로커의 검정 수사 무마·승진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 비위에 연루된 전직 경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호)는 제삼자 뇌물교부혐의로 경정으로 퇴직한 A씨와 지인B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B씨는 2021년 경찰관 C씨로부터 받은 뇌물 3000만 원을 전남청 전 경감 이모(구속기소)씨에게 전달, C씨의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다.

이씨는 받은 뇌물을 당시 전남청장에게 건네 청탁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로 구속돼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또 경찰 고위직과 친한 브로커 성모(61)씨에게 “(뇌물을 준 동료의) 승진 인사에 힘써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 대상이었던 C씨는 경정으로 승진했고, 해남경찰서에서 일하다 비위가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A·B씨는 오는 22일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을 하거나 수사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사관과 전 현직 경찰들을 조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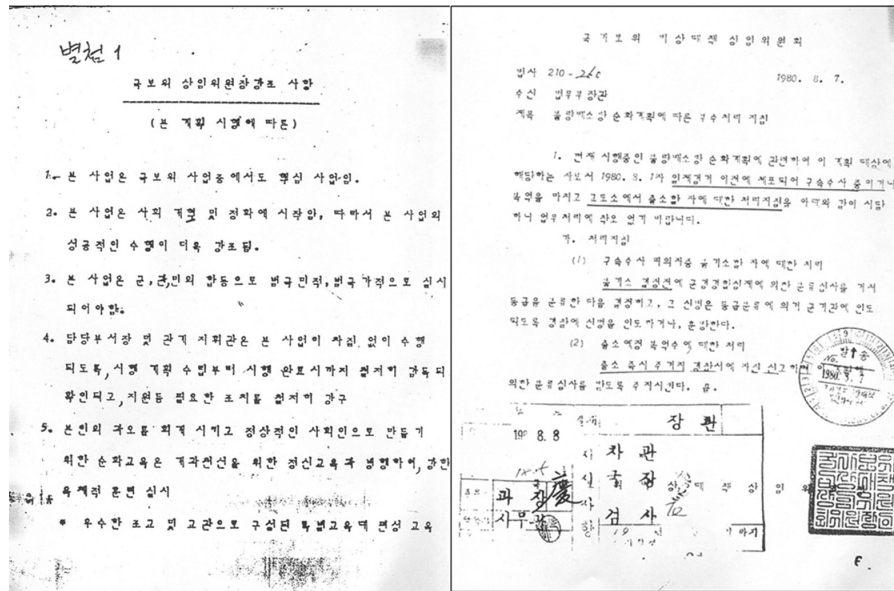
검찰은 성씨의 검·경 인사·수사 영향력 행사를 비롯해 지자체 관급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성씨는 공범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4·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채권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송민섭 기자

전두환, 삼청교육대 서류 ‘직인’... 개입 증거 찾았다

진실화해위, 국보위 문서 공개 전씨 “삼청교육대는 핵심 사업”

전두환이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상임위원장 재임 당시 삼청교육대 사업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 2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씨는 “(삼청교육대 사업은) 국보위 사업 중에서도 핵심 사업”이라며 “본인의 과오를 회개시키고 정상적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순화 교육을 개과전선(改過轉善)을 위한 정신교육과 병행해 강한 육체적 훈련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1980년 8월 1차 일제 검거 이전에 체포돼 구속 수사 중이거나 복역을 마치고 교도소에서 출소할 자에 대한 처리 지침도 법무부에 하달했다. 전씨는 구속 수사 피의자 중 불기소할 자에 대해선 불기소 결정 전에 군경 합심체에 의한 분류 심사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개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과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 처리지침 문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공

거쳐 등급을 분류한 다음 결정하고 그 신병을 군 기관에 인도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또 다른 문서인 ‘불량배 소탕 순화계획’에 따른 부수 처리지침’에 구체적으로 담겼다. 해당 문서에는 “불기소 결정 전에 군·검·경 합심체에 의해 분

류심사를 거쳐 등급을 분류한 다음 결정하고, 그 신병은 등급 분류에 의거 군기관에 인도되도록 경찰에 신병을 인도하거나 훈방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전씨의 직인도 찍혀있었다. 진화위 관계자는 “전두환이 삼청교육대

사업이 국보위 핵심사업이라고 규정한 문서를 확보해 당시 신군부 세력이 삼청교육 사건을 강조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진화위는 90명의 삼청교육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월까지 주민 26명이 부역 혐의자나 빨치산 협조자라는 이유로 희생된 ‘전남 장성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1)’과 1950년 11월부터 1951년 7월 사이 민간인 21명이 군경의 수복과 빨치산 토벌 작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 없이 희생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3)’ 등 11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재차 권고했다”며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759명 중 이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400명을 제외한 나머지 359명에 대해서도 빠르게 조사를 마칠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교복 가격 담합’ 광주지역 대리점주들 벌금형

29명에 최대 1200만원

법원이 광주지역에서 교복 가격을 담합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판매업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21일 입찰방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복업자 29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47개교의 발주한

161억 원 규모의 교복 구매 경쟁 입찰에서 387차례 중 289차례 담합했다. 이들은 공정 입찰을 방해하고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입찰 공고 게시 뒤 광주 5개 구를 권역별로 나눠 낙찰 예정 학교들에만 반값이 입찰했다. 사전 정보 교류(전화·문자·대면 상의 등)로 투찰가(희망 낙찰가)를 특정 금액대에 맞췄다. 학교 규모·학생 수에 따라 낙찰 예정자와 일명 들러리 업체를 미리 정해 투찰가를 공유했다. 들러리 업체가 낙찰 예정 업체보다 500원~1000원가량



높게 금액을 써냈고, 예정 업체가 최고가로 낙찰받았다.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미

담합 업체)에는 입찰 포기를 중용했다. 범행 업체는 총 45곳으로 각각 최소 3차례, 최대 39차례 담합했다. 낙찰률은 평균 96% 이상이었다. 교복 낙찰가가 평균 24%가량 높아졌고, 대리점주들은 32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교복값은 평균 23만 7500원에서 29만 6500원으로 올랐고 학생들이 매해 인당 약 6만 원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일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담합 행위를 해 공정 경쟁 실현을 침해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